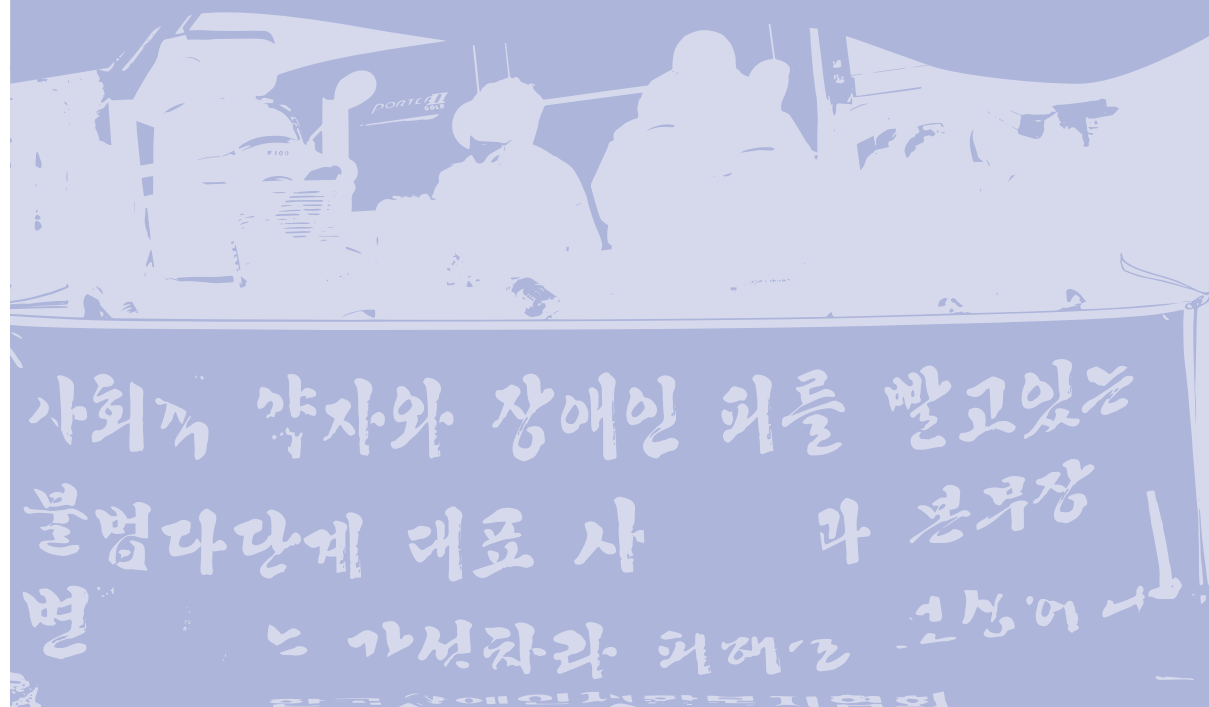


탈북인까지 속인 대규모 화장품 다단계 사기

기호일보

홍범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A사 동업자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가 2019년 4월 15일 인천지검 앞에서 수사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19년 3월 선배 지인과 인천시 공무원 등으로부터 시청 바로 밑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폰지 사기에 당해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아직도 그 피라미드 사기 회사에 수백 명이 남아 있다는 내용이 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

식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이다.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했다.

당시 찰스 폰지는 45일 뒤 원금 50%, 90일 뒤 원금 100%에 이르는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은 약속된 수익금이 지급되자 재 투자를 했고 자신의 지인을 2차 투자자로 모집했다.



A사 피해자 관련 단체가 2018년 4월9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딩 앞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 사기 방식이지만 미국 전역에 소문이 퍼져 투자자가 대규모로 모여들면서 찰스 폰지는 수개월 만에 갑부가 됐고 언론의 조명을 받아 유명 인사로 도약했다.

인천시청 주변에서 벌어진다는 폰지 사기가 찰스 폰지가 했던 방식과 똑같았다. 100년 전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인천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들의 방식은 이랬다. A사는 직원을 모집하며 ‘동업자’라는 이름으로 계약한 뒤 화장품 1세트를 2270만 원에 구매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 사무직 자리와 주당 300만

원의 수당을 준다고 약속했다. 처음 1~2번 정도 사무실 운영비 10%를 빼고 270만 원씩 지급해 약속을 지킨다. 그러나 A사는 말을 바꾼다.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 화장품 1세트를 구매하게 하거나 스스로 1세트를 더 구매해야 주급 수당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피해자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했다. 피해자들은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고 금액도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데스크와 선배, 나까지 3명이 피해자들을 두루 만났다. 다들 사연이 복잡했

“몸 바쳐 일해 얻은 건 원망뿐”

폰지 운영 회사에 당한 탈북인의 눈물

A사는 탈북인 B씨의 꿈을 송두리째 무너트렸다. B씨는 만나자 마자 눈시울이 젖었다. 1년여간 A사에게 당한 수탈이 북한에서 겪은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했다.

B씨는 A사 간부들 강요 때문에 지난해 3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4시간 동안 거짓 진술을 했다. A사 간부들은 부천소사경찰서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경찰을 고소했다. B씨는 공포증 때문에 A사 간부들에게 검찰 조사를 못한다고 했지만 탈북인 대표로 출석을 강요받은 것이다.

당시 A사 대표 등은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사는 이를 빠져 나가기 위해 동업자들을 동원한 것이다. 동업자 수백여명은 소사서에 들어가 항의했고, 이 때 소사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B씨는 A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다.

2017년 12월 A사를 알았고, 처음 거래(화장품 1세트 구매)를 틈 이후 15번의 신규 거래를 성공시켰다. 1회 구매당 2천270만 원이니 총 3억4천50만 원이다.

처음 거래를 트고 A사는 주급으로 150만 원씩 준다고 약속했다. B씨는 대출을 받아 1세트를 구매했다. 월 600만 원씩 받으면 1년이면 빚을 모두 갚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편까지 끌어 들였고, 돈이 없다는 남편 친구에게 B씨는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거래를 터졌다. 자식을 고령의 어머니에게 맡긴 남편 친구가 안타까워사였다.

B씨와 남편은 오전 5시30분 출근해 밤 늦게 퇴근했다. 청소 등 잡일까지 도맡았다. A사에 서 내 집 마련의 꿈까지 꿔다.

B씨는 “북쪽 아버지를 생각해 남편과 잘 사는 것이 효도라 생각해 A사가 제시한 아파트 프

로모션(3억 원)에 참여해 집을

대출까지 받아 물품 구매 거래 터준 지인들도 피해 간부들 폭언 더는 못 버티

사려고 했다”며 “돈이 모자라 자동차를 팔기도 대출까지 받아 4천500만 원을 넣었는데, 정착 지원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부터 수차례 지급하던 주급도 나오지 않아 B씨는 주먹을 먹고 죽으려고도 했다.

B씨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B씨가 거래를 터준 10여 명의 사람들은 주급 등이 나오지 않아 B씨를 욕했고, 돈까지 내놓으라고 했다.

A사 간부들의 폭언과 욕설도 나날이 심해졌다. 그 때 북에 있는 가족 때문에 나머지 돈을 받아야 해 버렸다. 이런데도 B씨를 A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지난 2월 결국 그만뒀다.

A사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동업자를 횡령 등 범죄자로 낙인 찍어 동업자들에게 소문을 낸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기호일보 신문 지면
(2019년 4월15일 9면)

다. 부부, 형제, 자매 등 가족들이 피해 입은 경우도 있고 친구끼리, 사회에서 만난 동료들까지 엮여 피해를 입었다.

그중 탈북인 B씨 사연이 가장 눈길을 끌며 따로 인터뷰를 지면에 실었다. B씨는 만나자 마자 눈시울이 젖었다. 1년여 간 A사에게 당한 수탈이 북한에서 겪은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했다. A사는 탈북인 B씨의 꿈을 송두리째 무너트렸다.

B씨는 2017년 12월 A사를 알았다. 처음 거래(화장품 1세트 구매)를 틈 이후 지인들을 소개하고 스스로 구매하는 등 신규 거래를 15번 성공시켰다. 1회 구매 당 2270만 원이니 총 3억4050만 원이다.

A사는 처음 거래를 트고 주급으로 150만 원씩 준다고 약속했다. 이때부터 B씨는 대출을 받아 1세트를 구매했다. 월 600만 원씩 받으면 1년이면 빚을 모두 갚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편은 물론 돈이 없다는 남편 친구까지 끌어들었다. B씨는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남편 친구 거래를 터졌다. 생활고로 자식을 나이 많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힘든 일을 하고 있던 남편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다.

B씨와 남편은 프로모션(수당)을 더 받기 위해 오전 5시30분에 출근해 늦은 밤 퇴근했다. 사무실 청소 등 잡일까지 도맡

사회공헌 사업·수상내역 수두룩… 알고보니 의혹 투성이

본지 A사 '착한 기업' 탈 쓰고 이미지 세탁 꼼수

본지를 하는 A사는 그동안 상패와 기부 내역으로 착한 기업 의 용례를 냈다. 기사에서 B씨는 연 홍보를 받았지만 실상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 22일 A사 홈페이지와 관련 보도에는 각종 사회공헌 사업과 수

상 내역들이 올라와 있다. 지난해 연말 A사 대표 B씨가 받은 상과 감사패만도 5개 이상이다. 기사에서 B씨는 약당 있는 CEO 또는 사회공헌가로 포장됐다. 하지만 수상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능어린 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B씨가 받은 대상 중 2개는 연

적년 받은 상·감사패만 5개 전년도엔 없던 분야로 대상 언론사 등과 '깜짝미' 정황 면세점까지 등장했다.다나... 실상은 이중 위탁운영 수준

본지가 주파하는 시사적이다. 이들 언론사에 소속됐거나 직을 했 던 관계자들은 B씨가 수상하기

전부터 A사에 대한 기사를 반박 적으로 실어 왔다. 한 포털에 A사 와 검색어가 정확히 일치하는 기 사 44건 중 이들이 쓴 기사는 13 개다. 이들은 지난해 A사가 갑판 조사를 받을 때도 유일하게 A사 임원을 실어 왔다. 감사패 또한 같은 언론사 관계자가 과거에 소 속된 단체가 B씨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감사패를 준 단체의 후원 회장 C씨는 A사의 고문으 로 활동하고 있다. 감사패 전달

보다 앞선 지난해 4월 후원 행사 에 B씨와 C씨, 대상을 준 언론사 관계자는 함께 참석했다. B씨는 지난 연말 2018년 **인정** 사회정의 의정대상까지 수상했 다. B씨가 받은 수상부품(중소기 기)은 전년도에는 없던 분야로 급 조한 상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의정의 측은 수상할 기업인들이 부록에 외부에서 추천 받았다고 설명했다. A사가 면세점에 입점 했고 수출계좌에 있어 수상에 분

제가 없었다는 이유다. 면세점 입점과 수출계좌는 A 사가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사회 공헌과 함께 자주 쓰는 수단이다. A사는 지난 8월 면세점 입점 사실을 알리며 연말에는 프로모 션 이벤트도 진행했다. A사는 자 일면국제광화 면세점 남포고 드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일면국제광화사와 각 면세점에 확 인한 결과 A사 이름으로 광화 면 세점에서 매출이 발생한 기록이

없다. A사는 화장품 제조업체사 도 아닌 제3의 유통사를 통해 화 장품을 팔고 있다. 이 역시도 중 소기업이나 대기업 면세사업자에 정식 입점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위탁운영하는 방식 이다. 한편, A사 전용소셜상 한에 A사 모든 제품은 품절됐다. A사는 최근 동업자들에게 수당 을 준다는 제구메(세트당 2천270 만 원)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본지 spring@khihoilbo.co.kr

폰지 운용 물의 빛은 A사 유사수신 혐의 적용될까?

부천소사를 혐의 변경했지만 금감원은 적용 가능성 무기

폰지(신종 금융 파라미드)를 하는 A사에 대한 수사에 물꼬가 트이면서 유사수신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지급했어도 수익 구조나 편취 의사를 꼼꼼히 따져 한

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3편> 24일 부천소사경찰서의 사법경찰 범죄사실 기소의견서에 따르면 A사 는 2천270만 원 상당 화장품을 구매 한 동업자에게 12주간 주급으로 15 0만 원씩 3개월간 총 1천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3개월 이후에는 전체 매출을 반으로 나눈 값의 10% 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총만 2명(매 출 4천540만 원)을 모집하면 수당 지 급 기준에 따라 매출의 20%를 지급 한다고 했다.

소사서는 지난해 3월 A사의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판단했지만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물건을 줬기 때문에 유사수 신이 아니라는 A사의 입장이 반영됐 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물건을 받았어도 비용이 그 가치에 상 응하는지를 따져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물 건의 가치를 너무 높게 책정했을 때 는 편취 의사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A사의 경우 제품 12개 20세트를 2천270만 원에 팔았다. 피해자들은 물품을 소비자가격으로 구입했으 며, 생산가격(원가)은 터무니없이 낮 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사 물품의 원가가 밝혀 지고 2천27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 한다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유사 수신까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금감원은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 금을 모집하는 것을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A사의 경우 별다른 수익활동 없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제품을 구 입하면 그 돈을 나누는 '이익 공유' 를 했다. 해외 수출과 인터넷 매출 등의 재원도 제시했지만 수출 매출 은 없고, 인터넷 매출도 크지 않았 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사례로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를 유 안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주식시 장 상황이 불기능한 업체를 곧 상장 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 수인을 상대로 자금 모집한 경우다.

A사는 주식 프로모션으로 협력 사 B사가 상장되면 주식과 배당금 을 주겠다고 200만 원씩을 받았다. 이 밖에 협력사인 B사에 2천만 원에 서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분배하겠다고 했다.

출처: 본지 spring@khihoilbo.co.kr

기호일보 신문 지면(2019년 4월25일 1면)

프로모션 등으로 낸 돈은 1억4000여 만 원이다. 여기서 주급 등으로 돌려받은 금 액은 6~8개월간 9540만 원이다. 언뜻 보면 4000만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A사에 출근해 근무한 임금까지 따지면 1억2440만 원을 못 받았 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낸 돈을 나눠서 조 금씩 받은 것과 다름없다.

A사 피해자의 슬픈 소식은 여기서 그

치지 않는다. 2018년 6월에는 동생과 함 께 5000만 원 정도를 A사에 투자한 70 대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피해자들은 2017년 11월 A사에 등록하고 동생도 가 입시켰지만 주급과 수당 등이 나오지 않 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것으 로 추정된다고 했다.

당시 A사 때문에 이혼한 피해자들도 다수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A사를 다니 다 돈을 뜯긴 여성 중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피 해자는 2천 명 이상”이라고 했다.

B씨 인터뷰 이후 취재 열망은 더 커졌 다. 300여 명으로 구성된 A사 피해자비상 대책위원회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검찰이 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는지 궁금해졌다. 이 부분을 집중 취재했다.

피해자비대위는 벌써 피해자가 약 1000명에 달하고 2018년부터 부천소사경 찰서가 수사한 결과 피해액이 3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부랴부랴 소사경찰서에 연 락해 수사 내용을 확인했다.

2018년 5월11일 소사경찰서는 방문판 매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사 사장을 수사했다.

소사경찰서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 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 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슨 이유 인지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전 화로 조사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



A사 피해자가 2018년 5월2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A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음 처분했다.

비대위는 인천지검 C검사의 부실 수사를 문제로 봤다. C검사가 소사서에서 기소의견으로 넘어온 사건을 피해자 1명만 불러 조사하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기 때문이다.

당시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했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피해자도 100명에 가까웠다. C검사는 피해자들이 A사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일부 피해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신용카드 결제기를 마련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홍사철 씨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시 그는 “C검사는 검찰청으로 찾아가 직접 진술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막

고 A사에게 유리한 진술만 채택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소사서 사건(부천지청 지휘)을 인천지검으로 지휘권을 넘기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비대위는 인천남동경찰서와 인천지검에 다시 A사를 고발했고 남동서는 A사 대표 등을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인천지검이 몽그적대자 비대위 피해자 330여 명은 인천지검 앞에서 수사 촉구 집회를 2주에 걸쳐 진행했다.

기호일보 취재와 피해자들의 대규모 집회, 남동서 수사 의지 등이 모여 인천지검을 다시 움직였다. 당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A사의 사기 등 사건이 5건, 경

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5건 정도 있었다. 검찰이 한 차례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이 다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데 남동서의 활약도 적지 않았다.

검찰은 A사와 관련된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필요하면 직접 A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피해자들은 A사에 납부한 등록비 등 1200억~1300억 원 정도의 매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A사 대표와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사 회장·대표 등은 애초부터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금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의지를 확인한 뒤 A사에 대한 추가 취재를 진행했다. 알고 보니 사회공헌 사업과 수상내역으로 피해자들을 계속 현혹하고 있었다.

그렇듯한 상패와 기부 내역으로 착한 기업의 흉내를 냈다. 면세점까지 입점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

A사는 2018년 8월 면세점 입점 사실을 알리며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 직접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납품코드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각 면세점에 확인한 결과 A사 이름으로 공항 면세점에서 매출이 발생한 기록이 없었다.

A사는 화장품 제조협력사도 아닌 제

3의 유통사를 통해 화장품을 팔고 있었다. 이는 면세사업자로 정식 입점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A사 대표가 받은 상과 감사패만도 5개 이상이었다. 역량 있는 CEO 또는 사회공헌가로 포장됐다. 그러나 수상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만들어진 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상 2개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시상식이었다. 이들 언론사에 소속됐거나 적을 뒀던 관계자들은 수상하기 전부터 A사에 대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실어 왔다고 했다. 한 포털에 A사와 검색어가 정확히 일치하는 기사 44건 중 이들 언론사가 쓴 기사는 13개다.

이들은 A사가 2018년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유일하게 A사 입장을 실어줬다. 감사패 또한 같은 언론사 관계자가 과거에 소속된 단체가 전달한 것이었다.

또 다른 감사패를 준 단체의 후원회장은 A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감사패 전달보다 앞선 지난해 4월 후원 행사에 A사 대표와 후원회장, 대상을 준 언론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A사는 2018년 인천시의정회 의정대상까지 수상했다. A사 대표가 받은 수상부문(중소기업)은 전년도에는 없던 분야로 급조한 상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의정회 측은 수상할 기업인들이 부족해 외부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의혹은 사라지

지 않았다.

이 사이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다. 피해자들 고소와 진술 조사 등을 토대로 A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사는 구속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돈을 십분 활용했다.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이 있는 법무법인 ‘솔’을 섭외했다. 수임료만 수억 원에 달한다는 추측이 나왔다. 전관 변호사 선임은 통했다. A사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2019년 12월31일 A사 대표와 간부 등 3명을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1월~2019년 11월 중 방문판매회사인 A사 등 2개사를 설립하고, 제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회원 총 3600여 명에게서 약 674억 원을 제공받은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사의 서민들 등골을 빨아먹는 사기 행각이 완전히 뿌리 뽑힐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말 예정된 첫 재판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고 몇 차례 더 연기된 끝에 2020년 4월에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범 죄가 현재 진행형이라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재판을 매우 신중히 진행했다. 재판은 두 달에 한 번씩 7차례 진행됐고 오는 8월 8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담당 판사는 연 말까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타까운 것은 검찰이 처음 혐의 없음 처분하고 지금 법원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피해자가 더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A사에 남아 폰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또 폰지 사기에 속아 다른 사람을 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 빨리 A사의 사기 행각이 멈출 수 있도록,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원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

이 사건 취재가 시작되자 A사는 기호일보 경영진을 찾아와 기사를 내려 달라고 읍소했고 A사는 나와 기호일보 대표이사, 임원, 사진기자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이용해 취재를 막고자 압박했다.

이 때문에 경영진은 취재기자들에게 취재를 접어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나는 박정환·이창호 기자와 함께 취재를 멈추지 않았고 홍사철 피해자비대위원장도 열과 성을 다해 취재에 도움을 줬다.

이후 홍사철 비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A사 피해자 300명 이상을 이끌어 다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검찰과 경찰을 도와 피의

자들을 법정에 세운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사건 취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치유할 수 있는 취재와 보도였다는 생각에 함께 한 기자들 모두 자랑스럽다. 이 글이 훗날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기사목록이다.

포털사이트에 단어 몇 개만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 (1) 투자금 돌려막기 들쭉라 동업자에 거짓 진술
강요 화장품 판매사 간 큰 행각
- (2) 몸 바쳐 일해 얻은 건 원망뿐
- (3) 폰지 사기 ‘혐의없음’ 검찰이 수상하다
- (4)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보내고 수당지급액 등
토해내려 되레 고소
- (5) 동업자 자금 380억 외부로 빼돌린 정황
- (6) 사람마다 다른 계약 조건에 출퇴근 시각
1분만 어겨도 수당 못 받아
- (7) 각종 프로모션 남발 눈속임 피해자,
동업자로 둔갑시켜
- (8) 전직 검경 고위직 친분 내세우며 피해자 이탈 막아
- (9) 추정 피해액 날로 눈덩이 사법기관 공정수사 목청
- (10)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
쫓아냈다 檢 적용 어렵다
- (11) 폰지 행각 A사 다단계 영업 ‘판박이’
- (12) 등록비 등 부당이익 ‘계좌 쪼개기’로 분산 송금
... 피해금액 수천억

- (13) 폰지 운용 A사 피해자들 횡령혐의로 대표
고소장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
- (14) 사회공헌 사업·수상내역 수수록 ...
알고보니 의혹 투성이
- (15) 폰지 운용 A사 검찰수사 ‘정조준’
- (16) 피해보상까지 ‘가시밭길’ 전망 회사
자금흐름 잡는 것이 우선
- (17) 폰지 운용 물의 빛은 A사 유사수신 혐의 적용될까
- (18) ‘경찰 강압수사’ 회사측 주장 인권위 조사결과
‘거짓’ 판명
- (19) 고소득 약속 믿고 빚까지 내서 올인
결국은 가정 파탄
- (20) 경찰 폰지 운영 A사 재조사 ...
이번엔 사기 혐의 밝혀낼까
- (21) 자회사 설립해 수익 준다며 돈 건어...유사수신
- (22) 등록비 매출 ‘개인사업자 명의로’
회사 피해자들 탈세 위한 꼼수
- (23) 폰지 운영사 피해자들 ‘시민청원’ 3000건
공감 필요한데 쉽지 않네
- (24) 폰지 운영사 국세청에 휴업신고 피해자
비대위 대표 도망 우려
- (25) 폰지 A사 8월 말까지 쉬어도 돼
동업자들에게는 임대료 내달라
- (26) 폰지 운용 A사 피해자들 분식회계 등
추가혐의 주장
- (27) 회원 상대 제품 판매→수당지급 ‘돌려막기’
인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운영자 셋 기소 ㉮